

# 노동력 아닌 주민으로... 전환의 시간

## 위기의 전남 이주민

전남의 이주민 수는 최근 10년 사이 급증했다. 농어촌과 산업 현장에서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들은 이미 지역사회의 주요 구성원이 됐다. 그러나 인구 증가 속도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정책은 충분히 정비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

◆종속 아닌 권리 중심...채류 정책의 전환

전남을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자녀 돌봄, 문화 적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이 여전히 이주여성을 '적응을 도와야 할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한다.

이에 따라 '적응'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정책을 이주민들의 권리 보장과 차별 해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표적인 쟁점은 '배우자 연동 체류' 구조다. 결혼이민(F-6) 체류 자격은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기반으로 유지된다. 가정폭력이나 갈등이 발생해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체류 자격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폭력 상황에서 문제 제기를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허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는 "이주노동자를 '값싼 노동력'으로, 이주여성을 '아이 낳는 도구'처럼 여기는 인식 자체가 문제"라며 "한국인 배우자에게 종속되는 가부장적이고 혈통 중심적인 체류 정책과 행정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차원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출발점이다. 전남도와 일선 시·군 차원에서 이주민에 대한 종합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보완할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장 지원 체계 역시 강화가 요구된다. 전남이주여성상담소는 지침상 8명까지 채용할 수 있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6명만 근무하고 있다. 22개 시·군을 돌며 상담과 법률 자문, 통역, 의료·보호시설 연계, 체류 지원까지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해 관련 인프라 확충도 시급한 과제다.

◆"불리해도 참아야" 노동 이주 제도 한계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학대가 반복되는 것 역시 구조의 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한국의 대표적인 노동 이주 제도

'적응' 관점에 머문 이주여성 체류 정책 전환해야

'종속형 체류 제도'가 인권침해... 노동허가제 요구  
지역사회 인식이 최우선... 마을 단위 교육도 시급



추석맞이 광산구청광배 전국 이주노동자 축구대회가 열린 지난해 광주 광산구 월전공원에서 선수들과 관중들이 응원을 펼치고 있다.

인 고용허가제(EPS)는 이주노동자가 특정 사업장에서만 근무하도록 하고 사업장 변경을 제한한다. 이 구조는 임금 체불이나 열악한 근로 환경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일터를 쉽게 벗어나거나 신고하기 어려운 조건을 만든다.

사실상 '사업주 종속형 체류 제도'로 전락해 폭언과 폭행, 임금체불, 과로 등 인권침해를 고착화하고 있다는 게 노동인권단체의 설명이다.

인권침해에 대한 당국의 감독·구제 시스템의 행정적 문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고용노동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 지자체 등 관리 당국의 감독이 부실하고 신고 후 구제 절차도 길다. 피해자는 체류 불안정으로 신고를 포기하거나, 신고 후에도 강제출국이나 보복 해고 등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손상용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노동 이주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과 '노동허가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도 이주노동자를 정착·체류로 안내하기 보다 임시 노동력이나 도구적 자원으로 보는 사회 인식이 뿌리가 깊

다. 우리 사회 노동·인권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역사회 인식 변화 최우선...마을 단위 교육 시급

제도 개선과 함께 지역사회 인식 변화가 가장 큰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 박빛나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대표는 "이주여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농어촌 지역 특성상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이 중심이 되는 인식 개선 교육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가 관련 교육을 정책으로 추진해 이주민을 마을 구성원으로 인식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은경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전남은 다문화 가구와 출생아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인식 개선 교육과 함께 제도적 책임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정부의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결혼이주여성과 가족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모든 이주민과 지역사회 인권을 아우르는 포괄적 정책 틀로 확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권철 기자

## 전남교육청, '2026 학교도서관 운영 매뉴얼' 개발 보급한다

AI시대 변화하는 인문학 교육 방향 제시... 담당교사 업무향상 지원

전라남도교육청은 AI시대 인문학(독서)교육이 강화됨에 따라 이를 실현하는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보완하며 학교도서관 담당교사 업무 향상을 지원하는 '학교도서관 운영 매뉴얼(개정판)'을 발간해 보급한다.

이번 개정된 '2026 학교도서관 운영 매뉴얼'은 AI시대 변화하는 인문학(독서)교육 방향 및 전남교육 실정에 맞춰 개정했다. 또, 학기초 새롭게 학교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빠르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뒀다.

핵심 내용은 ▲ 학교도서관의 정의 및 역할 ▲ 시기별 주요업무 체크리스트 ▲ 학기초 학교도서관 주요업무 ▲ 학교도서관 운영 노하우 등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매뉴얼 개발에는 초·중·고 각 학교급 별 사서교사(3명)와 학교도서관 담

당교사(3명) 및 나주교육지원청 순회사서(2명)로 구성된 학교도서관 핵심주체 8명이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전남은 전국적 비율상 사서교사 배치율이 낮고 작은학교 비중이 높은 편이라 지역별 순회 사서를 통해 학교도서관 업무를 지원하고 있지만, 학기초 처음으로 학교도서관 업무를 맡게 된 담당 교사들의 업무 지원이 즉각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라남도교육청은 누구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2026 학교도서관 운영 매뉴얼'을 24일 개최하는 '순회사서 정책 연찬회'를 통해 지역별 배부한 데 이어, 3월 첫 주에는 모든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26~27일에는 '학교도서관 담당교사 연수'를 동부권과 서부권을 나눠 실시한다. 이 연수는 올해 학교도서관 업무를 새롭게 맡게 되었거나 더 의미있게 학교도서관을 꾸리고 싶어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김영길 글로벌미래교육과장은 "AI시대 독서교육의 중심에는 '학교도서관'이 있다. 전남 학교의 교육과정 속 독서인문교육 정착과 내실화를 위해서는 현장 교사들의 활동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이번 매뉴얼 보급을 시작으로 학교도서관 및 독서인문교육 업무 담당 교사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염선호 기자

## 전남교육청, 2026학년도 '새학년 집중 준비기간' 운영

교육과정 준비·학생 적응·학교 안전 등 현장 맞춤형 지원 강화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2월 2주부터 4주까지 학교별로 '새학년 집중 준비 기간'을 운영하고,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시작을 지원한다.

새 학기 시작은 교육과정 운영 준비, 학급 환경 조성, 학생 생활지도, 안전 점검 등 다양한 업무가 동시에 이뤄져,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이 집중되는 시기다. 전남교육청은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새학년 집중 준비 기간은 도내 유·초·중·고·특수·각종 학교에서 학교별로 운영한다. 주요 활동 내용은 ▲ 만남과 소통의 시간 ▲ 교육과정 수립 및 업무 준비 ▲ 학생 적응 및 생활 지원 ▲ 교육활동 여건 개선 ▲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등 네 가지 영역이다.

특히 분청에서는 매뉴얼 자료 보급 및 현장 중심 지원을 통해 학교 현장의 업무 혼선을 줄이고, 정책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학교행정업무 경감 지원, 학교 업무 정상화 정책 안내, 학기 초 안전점검 및 대응 체계 지원에 주력하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김병남 유초등교육과장은 "새학기의 안정적인 출발은 한 해 교육활동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새학년 집중 준비기간 운영을 통해 학생의 안정적인 학교 적응을 돕고 교사의 교육활동 집중도를 높여, 학생 중심 교육이 실현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전민규 기자

## 광주경찰 '새 집회 대응 패러다임' 첫 적용... 시민 불편 최소화

광주경찰청이 올해 새롭게 도입된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을 적용, 최근 6000명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에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며 안전하게 집회를 유지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경찰은 지난 22일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변화된 대응 기조에 맞춰 주최 측의 자율적인 질서유지를 지원하는 데 주력했다.

최근 과격·불법 시위가 감소하고 경찰의 대응 역량이 향상된 데에 따라 경찰은 기존의 '사전적·예방적'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주최 측의 책임을 강화하고, 경찰은

'사후적·보충적'으로 질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체질 개선을 추진해왔다.

광주경찰청은 이번 집회에 앞서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참가 인원 및 규모 ▲불법 집회 전력 ▲소음 및 교통체증 유발 가능성 ▲안전사고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사전 안전평가를 실시해 단계별 적정경력 지침에 따라 불필요한 경력 배치를 지양하고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교통 관리에 노력하는 등 유연하게 대응했다.

특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주최자 책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광주경찰은 자체 제작한 집회 질서유지인

안내문을 배포하고, 집회 개최 전 주최 측 질서유지인들과 사전 간담회를 통해 자율적 질서유지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또 집회 현장의 소통 창구이자 갈등 완충대 역할을 하는 '대화경찰'의 기능도 대폭 강화했다. 기존 정보 기능 위주의 활동을 확대하여 경비, 교통, 지역경찰 기능이 함께 참여하는 대화경찰팀을 구성해 현장 투입했다. 이들은 집회 참가자와 시민, 경찰, 기타 행정기관 간의 가교 역할을 하며 인권 보호와 안전확보, 공공질서 유지를 입체적으로 지원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숙한 집회 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